

# 강소기업 육성 R&D 지원사업 운영지침

##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화성산업진흥원 지원사업 운영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5조, 제6조, 제7조에 따라 화성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강소기업 육성 R&D 지원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기획·평가·관리 등 운영에 관한 기준 및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수행과제’라 함은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진흥원장이 지정 또는 선정하는 과제를 말한다.
- ‘수행기관’은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들을 말하며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으로 구분한다.
- ‘주관기관’은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 중 과제의 전반적인 수행을 주관하는 중소·중견기업을 의미하며, 사업계획서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
- ‘참여기관’은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 중 주관기관 외 대학·연구소 등을 의미하며, 사업계획서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기관을 말한다.
- ‘과제참여자’는 사업계획서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 및 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인력을 말한다.
- ‘총 사업기간’은 최초 과제시작일로부터 최종 과제종료일까지의 협약기간을 말한다.
- ‘자유공모’라 함은 수행과제를 모두 공모에 의하여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 ‘문제과제’라 함은 평가 결과가 중단 또는 실패인 과제, 규정 및 지침 위반 또는 협약 위배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과제를 말한다.
- ‘실시’라 함은 사업수행결과를 사용(수행결과를 사용하여 생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양도(기술 이전을 포함한다)·대여 또는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 ‘기술료’라 함은 사업수행결과를 실시하는 권리(이하 “실시권”이라 한다)를 획득하는 대가로 실시권자가 진흥원 또는 사업수행결과의 소유권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 ‘지식재산권’이라 함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및 기타 지식재산에 관하여 법률로 정한 권리 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관계된 권리를 말한다.
- ‘성과활용’이라 함은 사업 수행으로 발생하는 유·무형적 결과물을 실시하거나 활용하여 기술적·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보고 및 발표 등을 할 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수행자 자신의 사업수행 자료 또는 결과 등을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를 하는 경우
- 나. 수행자 자신의 사업수행 자료 또는 결과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자료 또는 결과 등을 표절하는 행위
- 다.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수행을 하는 행위

### <사업비 관련 용어>

- . ‘지원금’ 이라 함은 과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진흥원장이 수행기관에게 지급하는 소요경비를 말한다.
- . ‘사업비’ 라 함은 과제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지원금과 민간부담금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 . ‘민간부담금’ 은 사업비 중 지원금을 제외한 비용으로 주관기관 등이 부담하는 현금(이하 ‘민간 현금’ 이라 한다)과 현물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 . ‘현물’ 은 주관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민간부담금 중 [별표 2]에서 정한 범위를 현금 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 . ‘비목’ 은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를 말한다.
- . ‘세목’ 은 비목의 세부항목을 의미하며 내부인건비, 외부인건비,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연구 활동비 등으로 구분된다.
- . ‘참여율’ 은 과제참여자가 수행하는 과제에 참여하는 비율을 말한다.
- . ‘정산잔액’ 은 연차정산에 따라 확정된 사업비 사용잔액과 정산 후 부당집행분으로 확정된 불인정 금액의 합을 말한다.
- . ‘위약금’ 은 정산결과 부당집행분으로 확정된 불인정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 . ‘진흥원지분액’ 은 정산잔액과 위약금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지원금과 민간현금을 합한 금액 중 지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text{진흥원지분액} = (\text{정산잔액} + \text{위약금}) \times \frac{\text{지원금}}{\text{지원금} + \text{민간현금}}$
---

### 제3조(적용 범위)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강소기업 육성 R&D 지원사업’ 으로 한정한다. 단, 본 지침에도 불구하고 사업공고 시 진흥원장이 공지한 사항은 공고문의 내용을 우선 적용하며 사업비 관리 및 정산에 관한 세부사항은 「강소기업 육성 R&D 지원사업 사업비 관리 및 정산에 관한 세부지침」을 따른다.

## 제2장 사업의 추진체계

### 제4조(평가위원회)

① 진흥원장은 사업의 효율적인 기획·평가·관리를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할 수 있다.

1. 지원대상 분야 또는 지원대상 과제 도출
2. 신규 선정평가, 중간평가, 최종수행결과 평가 및 성과활용평가 등
3. 문제과제의 제재·환수에 관한 사항
4. 진흥원장이 사업 또는 과제의 기획·평가·관리를 위해 평가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경우 평가위원의 자격 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평가위원회 등록 시 [별표 1] 양식에 따른 평가위원 정보를 제공 받아야 한다.

1. 산업계(기업, 업종별 단체 및 민간협회 등 포함)
    - 가.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소지자
    - 나.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5년 이상 경력자
    - 다.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7년 이상 경력자
    - 라. 부장급 또는 이에 상당한 직급 이상인 자
  2. 학계
    - 가. 2년제 대학 이상에서 조교수 또는 산학협력단의 팀장급 이상인 자
  3. 연구계
    - 가.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소지자
    - 나.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5년 이상 경력자
    - 다.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7년 이상 경력자
  4. 공무원
    - 가.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해당분야의 전문성이 인정되는 자
  5. 공인회계사, 변리사, 변호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등
  6.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 금융기관의 심사역, 감사역 이상인 자
  7. 기타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③ 진흥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위원을 평가위원회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기본 정보 미제공이나 미흡으로 활용이 불가능한 자
  2. 국가연구개발사업, 화성시 및 진흥원 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자
  3. 평가위원 등록을 신청할 때 허위사실을 기재한 자

4. 이 지침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자
5. 불성실하거나 불공정하게 평가를 행한 사실이 있는 자
6. 기타 평가위원회로 활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

④ 진흥원장은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경우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평가위원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1. 과제책임자 또는 부문책임자와 동일기관에 소속한 자, 평가 대상과제의 과제참여자 등 해당 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
2. 평가대상과제의 참여연구원
3. 상호간 평가자(‘상호간 평가자’란 신규 공모한 사업 중 동일 사업의 A과제와 B과제에 대한 평가가 진행될 경우, A과제의 과제책임자 및 참여기관 책임자가 B과제에 대한 평가위원 a가 되는 것과 동시에 B과제의 과제책임자 및 참여기관 책임자가 A과제의 평가위원 b가 될 경우의 a와 b를 말한다. 단, 어느 한쪽만이 상대방 평가위원으로 참석하는 일방 평가의 경우는 배제사유에서 제외된다.)
4. 불성실·불공정한 평가나 비밀유지 위반 등으로 위원의 자격에 제한을 받은 자
5. 해당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자발적으로 참여를 고사한 자
6. 그 밖에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⑤ 평가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평가 참여를 회피하여야 한다.

1. 평가 대상과제의 과제책임자·부문책임자와 사제관계(최종 학위의 지도교수에 한함)이거나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계약사의 소속 직원인 경우
2.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⑥ 심의 또는 평가를 받는 기관은 심의 또는 평가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평가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피 대상 위원을 제외한 평가위원이 논의를 거쳐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⑦ 평가위원회는 발표평가, 서면평가, 현장방문평가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⑧ 진흥원장은 평가위원이 평가위원회 및 현장실태조사 등에 참여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주관기관)

① 해당 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사업계획서 등 신청 서류 제출
2. 과제 협약체결 및 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3. 주관기관이 부담하기로 한 사업비의 부담
4. 과제 수행에 필요한 참여인력, 시설의 확보 및 행정지원

5. 사업비의 관리 및 사업비 사용실적의 보고
6. 중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의 제출
7. 과제수행결과의 활용 및 활용현황보고서 등 제출
8. 기술료의 징수 · 사용 · 납부 및 그 실적의 보고
9. 수행과제의 보안관리
10. 연구윤리 준수

- ② 진흥원장은 사업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주관기관의 자격 및 형태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③ 주관기관의 장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과제를 다른 기관과 협동 또는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 제6조(참여기관)

- ① 해당 과제를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참여기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수행과제의 공동 참여 및 협력
  2. 참여기관이 부담하기로 한 사업비의 부담
  3. 과제수행결과의 활용 등
- ② 진흥원장은 사업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참여기관의 자격 및 형태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총괄책임자)

- ① 해당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이하 “총괄책임자”라 한다)는 주관기관에 소속된 자를 원칙으로 해당 분야에 대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자로 한다.
- ② 총괄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사업계획서의 작성
  2. 사업비의 사용 발의
  3. 과제 수행과정의 조정 및 감독
  4. 수행과제의 중간 결과보고서 및 최종 결과보고서, 성과활용 현황보고서의 작성 및 결과보고
  5. 과제수행 결과의 실시 등 성과 활용
- ③ 총괄책임자는 제2항에서 정한 권한과 책임의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사망, 이민, 퇴직, 부서 이동, 3개월 이상 장기출장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할 수 없다.

## 제3장 사업 시행계획 공고

### 제8조(시행계획의 공고)

① 진흥원장은 매년 당해연도 사업의 추진방향 및 지원계획·일정 등 주요내용을 포함하는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 및 사회·경제적인 파장이 우려되는 경우나 정책지정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1. 사업 추진 목적, 사업 내용 및 사업기간
2. 사업 공모 방식 및 지원대상 분야
3. 사업 추진체계
4. 신청 자격, 신청방법 및 신청기한
5. 사업비 지원규모 및 기준
6. 기술료 징수 여부, 기준 및 방법
7. 평가절차 및 평가기준(가점부여 및 우대기준 포함)
8. 근거법령 및 규정
9. 기타 사업계획서 심의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진흥원장은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 특성상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장 사업의 신청 및 선정

### 제9조(사업의 신청)

① 제8조에 따라 공고된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주관기관은 별도로 정한 서식에 따라 사업계획서 및 관련서류(전자파일 포함)를 작성하여 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서에는 사업의 유형 및 추진 목적에 부합되는 사항이 명확히 제시되어야 하며, 사업별 특성에 따라 별도로 요구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신청하려는 주관기관장 및 과제참여자는 자격조건의 사전검토를 위해 신용정보 조회 동의 등 진흥원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협조하여야 한다. 진흥원장은 정해진 기한 내에 신용정보 조회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업 참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 제10조(사업계획서의 검토 및 평가)

① 진흥원장은 사업계획서의 검토 및 평가를 위해 사업계획서의 구비요건, 자격조건 등에 대한 사전검토를 실시하여 평가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② 진흥원장은 사업계획서 등의 검토 시 필요할 경우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분야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진흥원장은 필요시 과제를 신청한 기관에 공고 시 명시된 제출서류 이외에 참여기관의 자격요건 확인 등을 위한 별도의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주관기관장은 사업계획서의 중요내용 작성이 누락되는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 진흥원장이 요청한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진흥원장은 주관기관장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과제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⑤ 진흥원장은 주관기관 등이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선정된 이후라도 협약 이전에 해당 사실이 발생 또는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사업 공고 시 별도로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에 따른다.

1. 수행기관 신청자격 및 신청요건이 부적합한 경우
2. 신청과제가 공고된 사업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3. 신청된 세부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의 중복성(기지원, 기개발)이 인정된 경우
4.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참여기관, 과제책임자, 부문책임자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산학연 사업에 제재조치(참여제한) 대상일 경우
5. 주관기관, 참여기관, 과제책임자, 부문책임자 등이 부도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과제 선정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인 경우

6. 사업공고 시 제시한 별도의 참여자격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⑥ 진흥원장은 사업계획서의 평가를 위해 제4조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수행과제의 목표, 내용 및 수행방법
2. 수행과제의 수행능력(총괄책임자의 연구 능력 및 수행기관의 관리·지원능력 등 포함)
3. 수행과제의 추진체계 및 수행기관의 역할 분담
4. 과제 수행을 위한 시설 확보 정도 및 연구장비 구축 타당성
5. 사업비 계상 및 개발기간의 타당성
6. 중복성(기 개발·기 지원) 여부
7. 사업 결과의 활용 가능성

⑦ 진흥원장은 화성시 산업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대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거나 평가할 때 가점을 부여하는 방법 등으로 우대할 수 있다.

⑧ 평가는 서류평가 또는 발표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서류평가와 발표평가를 모두 시행할 수 있으며 시장성 검증 및 현장실태조사를 병행할 수 있다.

⑨ 발표평가는 원칙적으로 과제책임자가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발표하며, 부득이한 경우 주관기관장은 진흥원장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 과제참여자 중 1인에게 발표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진흥원장은 과제수행 중 과제책임자가 발표하는 모든 경우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⑩ 진흥원장은 평가위원회 평가결과에 따라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업계획에 대하여 이를 통합하거나 공동 연구로 조직화하여 사업계획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때, 일정기간을 정하여 해당 주관기관이나 총괄책임자로 하여금 사업계획서 등을 보완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⑪ 종합평점은 위원별 점수 중 최고·최저를 제외한 점수의 산술평균으로 하고, 같은 점수의 최고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 나올 경우 그 중 하나를 제외하여 계산한다. 또한, 가점 적용이 있는 사업의 경우 산술평균에 가점 점수를 더하여 반영한다.

⑫ 진흥원장은 평가결과를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⑬ 진흥원장은 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및 의견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⑭ 주관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평가결과에 대해 선정방법 및 절차 등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진흥원장이 평가결과를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진흥원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하며 주관기관장 명의의 공문과 이의사유서를 첨부하여 진흥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단, 주관기관장은 상대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할 수 없다.

⑮ 진흥원장은 이의신청이 접수된 사안에 따라 자체검토 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원안확정’ 또는 ‘재평가’를 의결할 수 있다.

⑯ 진흥원장은 제15항에 따라 처리한 결과를 주관기관장에게 통보한다.

## 제11조(수행기관의 선정)

① 진흥원장은 제10조에 따른 사업계획서 평가결과, 예산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수행기관을 최종 확정하며 이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선정통보를 받은 주관기관의 장이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사업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6조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③ 진흥원장은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사업계획서 내용 등이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동일과제가 중복되어 선정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 등의 사유 발생 시 해당 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때 진흥원장은 선정을 취소한 사유를 주관기관장에게 통보한다.

## 제5장 사업비의 산정

### 제12조(사업비 계상)

- ① 사업비는 지원금과 수행기관이 부담하는 민간부담금(민간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한다. 이때 진흥원장은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민간부담금 부담기준을 달리할 수 있으며, 사업공고 시 구체적인 사항을 공지한다.
- ② 사업비는 과제별로 계상하며, 사용 용도에 따라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로 구성한다. 이때 사업비의 비목별 사용용도 및 계상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 ③ 사업비는 수행기관별로 각각 산정하고, 주관기관은 각 수행기관이 산정한 사업비 총괄내역을 사업 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 ④ 주관기관장은 진흥원장이 평가위원회 등을 통한 사업계획서 검토 결과 사업비 조정을 요청한 경우 조정된 내역을 반영하여 재산정하여야 한다.

### 제13조(지원금의 지급기준)

- ① 진흥원장은 여러 개의 세부과제가 하나의 과제를 구성하는 경우, 세부과제 단위로 지원금 지급기준을 적용한다.
- ② 진흥원장은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분할 또는 변경하여 주관기관장에게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민간부담금)

- ① 사업비 중 지원금을 제외한 비용(이하 “민간부담금”이라 한다)은 수행기관이 현금이나 현물로 부담한다.
- ② 다음 각 호에 소요되는 경비는 민간부담금 중 현물부담으로 인정한다.
  1. 기업체 참여연구원이 원소속기관에서 지급 받는 인건비
  2. 수행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또는 연구시설의 사용료 등
  3. 수행기관이 보유 또는 생산하거나 판매 중인 건품·시약·재료·연구기자재 등
  4. 기타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현물부담으로 인정하는 경우
- ③ 제2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업 소속 연구원에게 지급한 지원금은 민간부담금 중 현물로 중복하여 계상할 수 없다.
  1.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중소·중견기업에서 신규로 채용하는 학사학위 소지자 이상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2. 디자인, 설계, S/W, 콘텐츠 개발 등 지식서비스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3.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된 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4. 기타 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진흥원장이 인정하는 분야

## 제6장 협약 체결 및 사업비의 관리·사용

### 제15조(협약의 체결)

① 주관기관의 장은 제11조에 따라 선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진흥원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1. 과제명 및 협약 기간
2. 총괄책임자 및 수행기관에 관한 사항
3. 사업비의 지급, 사용, 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
4. 과제수행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5.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6. 기술료에 관한 사항
7. 성과물의 귀속·활용 및 이전에 관한 사항
8. 협약 위반 시의 제재·환수에 관한 사항
9. 성과의 등록·기탁에 관한 사항
10. 연구윤리 준수 및 연구부정행위 방지에 관한 사항
11.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소정의 서류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정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진흥원장은 해당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때 진흥원장은 주관기관장에게 선정 취소를 통보하고, 평가위원회 심의결과의 차순위 사업자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참여기관이 있는 과제는 진흥원장,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이 일괄하여 협약을 체결하거나, 진흥원장은 주관기관의 장과, 주관기관의 장은 참여기관의 장과 개별적으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협약은 총 과제수행기간에 대해 일괄하여 체결하는 것(이하 “일괄협약”이라 한다)을 원칙으로 한다.

### 제16조(협약의 변경)

① 진흥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진흥원장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
2. 주관기관의 장이 협약 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3. 다년도 협약을 체결한 과제의 경우 진흥원의 예산사정, 연차별 실적·계획서의 평가결과에 따라 협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4. 수행기관이 과제의 참여를 포기한 경우

② 주관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협약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진흥원장에게 해당 연도 협약 종료 2개월 전까지 협약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단, 총 사업기간이 3개월 이하인 과제의 경우 사업종료 1개월 전까지 진흥원장에게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때 제1호에 따른 승인사항의 경우 진흥원장이 승인한 날부터 협약이 변경되며, 제2호에 따른 통보사항의 경우 진흥원장이 해당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간주한다.

1. 승인사항

가. 주관기관의 변경

나. 최종 목표의 변경

다. 총괄책임자의 변경

라. 참여기관의 변경

마 최초 협정한 사업비 대비 인건비의 20% 이상 증액

바. 과제수행기간 변경

사. 최초 협정한 사업비 대비 수행기관별 사업비 총액의 변경

아. 비목 간 예산 변경

2. 통보사항

가.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주소(연락처), 대표자, 회사 명칭의 변경

나. 세목 간 예산 변경

③ 진흥원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라 협약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요청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주관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 처리가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통보하여 처리 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④ 주관기관장은 협약변경이 필요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즉시 진흥원과 협의 후 협약을 변경하는 데 필요한 소정의 서류를 작성하여 진흥원장에게 제출한다.

⑤ 협약 전 변경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협약변경 승인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⑥ 진흥원장은 협약체결 전 협약변경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주관기관장에게 과제계획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승인요청사항 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당초 계획한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거나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 제17조(협약의 해약)

① 진흥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장 또는 참여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기 수행 되었거나 진행 중인 다른 과제와 내용이 중복되게 수행하는 경우
2. 보고서 미제출, 사업비의 목적 외 사용 등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사업 수행이 지연되거나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사업의 수행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5. 제21조 제1항에 의한 중간평가 등으로 중단조치가 내려진 경우
6.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 등에서 부도 · 법정관리 · 폐업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사업계획서 또는 제출 서류가 허위로 확인된 경우
8. 과제의 평가에 응하지 않는 경우
9.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 과제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10.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된 경우
11. 과제의 계속 수행이 불필요하다고 진흥원장이 판단하는 경우
12. 선정평가 결과를 반영한 사업계획서의 수정·보완에 응하지 않을 경우

② 진흥원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업비의 집행 중지, 현장실태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약된 경우 진흥원장은 해당기관 또는 해당자에 대해 귀책 사유에 따라 제재 및 환수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8조(지원금의 지급)

① 진흥원장은 협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과제별로 주관기관에 지원금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4조에 따라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부담하는 과제는 사업비 계좌에 민간부담금 중 현금의 입금이 확인된 경우 지원금을 지급한다.

③ 진흥원장은 수행기관이 공고문 및 본 지침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자격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또는 과제책임자 및 부문책임자, 수행기관의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여부 등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중지 · 환수할 수 있다.

④ 진흥원장은 사업계획서의 보완을 조건으로 지원 결정된 과제의 지원금을 협약 후 이행조건을 완수할 때까지 자체 관리할 수 있다.

⑤ 진흥원장은 부득이하게 협약이 지연된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당초 사업기간이 변경된 경우 등에는 협약체결일 이전의 사업비 집행을 소급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⑥ 진흥원장은 주관기관장에게 지원금 전액에 대한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해진 기한 내에 주관기관장이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협약 포기로 간주한다.  
이때 진흥원장은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제19조(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① 수행기관의 장은 제18조에 따른 지원금과 민간부담 현금을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통장 및 계정을 두어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행기관의 장은 사업비 지출 시 제1항의 통장이나 계정과 연결된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하여야 하며, 현금은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하게 현금 사용 사유 발생 시 사전에 진흥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행기관별 사업비는 제15조에 따른 협약과 관련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수행기관 해당과제 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 때 사업 목적 외로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진흥원장은 귀책대상기관 또는 귀책대상자에 대해 제30조에 따른 제재 및 환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사업비는 협약기간 내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 다년도 과제의 경우 연차별 사업비의 사용 잔액은 차년도 해당 과제의 사업비 비목으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⑥ 협약기간 중 개별과제에서 발생한 사업비 이자는 그 과제의 사업비에 산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⑨ 수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에 예치한 사업비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고 사용하여야 하며, 사업비를 사용한 때에는 증빙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⑪ 진흥원장은 수행기관의 사업비 사용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현장점검(점검 일정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는 불시 현장점검을 포함)을 실시할 수 있다.

⑫ 진흥원장은 사업비 관리 및 사용에 대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제7장 사업 결과의 평가 및 사업비의 정산

### 제20조(사업 결과의 보고)

① 주관기관의 장은 과제가 종료된 때에는 과제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단, 사업 종료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에 별도 서식에 의한 최종보고서(전자파일 포함)와 보고서 초록을 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진흥원장은 사업의 특성에 따라 중간보고서를 주관기관의 장으로부터 보고받을 수 있다.

## 제21조(사업 결과의 평가)

① 진흥원장은 제20조에 따른 과제수행결과에 대해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20조에 따라 주관기관의 장이 제출한 중간보고서를 점검하여 “계속”, “중단”, “조기종료”로 구분한다. 다만, 정밀점검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실태조사 또는 평가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2. 제20조에 따라 제출받은 최종보고서에 대하여 현장실태조사 또는 평가위원회 평가 등을 거쳐 “성공(우수, 보통)” 또는 “실패”로 평가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평가는 평가대상 과제의 규모 등 사업별 특성에 따라 상대평가 또는 절대평가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진흥원장이 제1항에 따른 사업결과 및 문제과제를 심의하기 위해 제4조에 따른 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과제의 수행기관 선정 평가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단, 정책지정과제의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④ 진흥원장은 평가위원회가 제출자료의 미비 등을 이유로 수행결과에 대해 평가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한 경우, 일정 기간을 두어 주관기관의 장에게 자료를 보완하게 한 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의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진흥원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에 따른 처리는 제10조 제14항을 준용한다.

⑥ 진흥원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제22조(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① 주관기관의 장은 협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비 사용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고 진흥원장이 지정한 공인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회계감사보고서의 결과를 진흥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주관기관의 부도, 폐업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총괄이 곤란할 경우에는 전담기관장이 지정하는 참여기관장이 이를 총괄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② 주관기관의 장은 협약기간 종료에 따른 사업비의 사용잔액과 정산 결과 부당집행분으로 확정된 불인정금액을 진흥원장에게 보고하고, 지침에서 정하는 위약금을 포함한 진흥원지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산결과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전담기관장이 지정하는 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단, 주관기관의 부도, 폐업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참여기관장이 이를 입금하여야 한다.

③ 진흥원장은 사업비 정산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실태조사 등을 실시하여 관련 증빙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주관기관의 장은 진흥원장으로부터 통보 받은 정산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정산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진흥원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단,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⑥ 진흥원장은 사업비 정산 결과 사용 잔액이 있거나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결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하 ‘정산금’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중 지원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한다.

## 제8장 사업의 사후관리 및 성과활용

### 제23조(성과물의 귀속 등)

① 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하는 연구기자재,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결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를 조건으로 부담한 유형적 결과물은 해당 참여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② 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무형적 결과물을 참여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1. 참여기관이 자체 개발하거나 주도적으로 개발한 무형적 결과물의 경우
2. 주관기관이 무형적 결과물을 소유할 의사가 없는 경우
3. 참여기관이 무형적 결과물을 소유하거나,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 성과의 활용을 위해서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④ 제1항 내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진흥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유·무형적 결과물을 진흥원의 소유로 할 수 있다.

1. 사업수행결과를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수행기관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3. 주관기관인 영리기관이 직접 실시하고자 하는 결과물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4. 기타 수행기관이 소유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제25조 제1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하는 과제의 주관기관의 장 또는 참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제의 참여기관, 실시기관 등과 협의하여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결과물을 그 과제의 참여기관, 실시기관 또는 다른 적정한 기관(국내에 있는 기관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에게 양여할 수 있다. 다만, 수행기관이 결과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경우에는 해당 과제를 수행한 과제책임자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유형적 결과물의 경우에는 결과물을 소유한 수행기관이 실시기관 등으로부터 지원금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술료 등으로 회수한 경우
2. 제2항에 따른 무형적 결과물의 경우에는 실시기관 등으로부터 기술료의 징수를 완료한 경우

⑥ 수행기관의 장은 사업수행결과에 따른 결과로서 지식재산권을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지식재산권의 경우에는 지식재산권 출원서 또는 등록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출원 또는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지식재산권을 국내에 출원 또는 등록할 경우에는 과제별 고유번호, 과제명의 기재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수행기관의 임직원, 과제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 개인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하지 않아야 한다.
3. 국외에서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경우에는 등록공보 발간 이후 3개월 이내에 등록공보의 사본을 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수행기관의 장은 해당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유·무형적 결과물의 유지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가지며, 기술의 실시 등 적절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행기간 중에는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 제24조(사업결과의 공개 및 활용 촉진)

① 주관기관장은 활용되지 않은 사업수행결과를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거래기관 또는 동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기술신탁관리기관에 사업수행결과의 제3자에 대한 양도, 실시 등 거래(이하 ‘기술거래’라 한다)를 의뢰할 수 있으며, 진흥원장의 승인을 득하여 기술거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기술거래의 목적물은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출원 또는 등록된 권리 또는 「저작권법」에 따른 프로그램저작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비롯하여 사업수행결과의 실시에도 필요한 노하우 등을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25조(기술료)

① 진흥원장은 성공과제 또는 총 사업기간 종료 후 주관기관에 대하여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기술료 징수 및 관리·활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진흥원장은 기술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하거나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26조(사업 종료 후 활용 보고 및 평가)

① 제20조에 따라 “성공”으로 평가된 과제의 주관기관의 장은 별도 서식에 의한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과제 종료연도부터 3년간 매년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진흥원장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제출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성과활용현황보고서 제출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실시기관은 사업수행결과의 활용현황을 3년간 매년 주관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제1항에 따른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 제27조(사업 보안)

① 수행기관의 장은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요 정보 및 결과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안조치
2. 과제수행관련 정보 · 연구시설 등에 대한 보안조치
3. 과제수행내용 및 수행결과의 대외 발표 시 보안조치
4. 과제수행에 사용되는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조치

② 진흥원장은 사업의 보안실태에 대하여 점검하고 개선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수행기관의 보안실태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다.

## 제28조(연구윤리의 확보)

①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및 단체, 연구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그 절차 및 방법 등이 연구윤리에 위배 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진흥원장은 연구윤리의 확보 및 연구 부정행위의 방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제29조(비밀준수 및 청렴의무)

① 평가위원회 등에 참여한 위원, 진흥원 소속직원, 수행기관 및 참여연구원 등이 사업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제30조에 따른 제재조치 및 자체 규정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신청기관 및 수행기관의 사업계획서 · 보고서 내용, 영업 비밀 등과 관련되는 사항
2. 평가위원별 점수 및 의견
3. 평가위원회 회의록

② 평가위원회 등에 참여한 위원, 진흥원 소속직원 등은 과제의 선정 및 관리에 대해 청렴 의무를 가져야 하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제30조에 따른 제재조치 및 자체 내부 규정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30조(문제과제에 대한 참여 제한 등)

① 진흥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귀책사유에 따라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단체, 기업 또는 소속임직원에 대하여 [별표 3]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화성시 및 진흥원 사업에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 때 각 호의 사항 중 둘 이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 참여제한 기간을 5년까지 합산할 수 있다.

1. 과제수행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단되거나 실패한 경우
2.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과제수행내용을 누설, 유출하거나, 제29조를 위반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과제수행을 포기하거나 협약 해약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기관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정산금 또는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한 경우

6. 사업비를 사용 목적 외로 집행한 경우

7. 18조에 따른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제20조에 따른 과제수행결과보고서, 제22조에 따른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및 제26조에 따른 결과 활용현황보고서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8. 과제수행 관련 자료 및 결과를 위조, 변조, 표절하거나 부당하게 논문저자를 표시하는 등 연구부정 행위를 한 경우

9. 수행기관의 부도·폐업으로 과제가 중단되거나 실패한 경우

10.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과제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협약 해약된 경우

11. 정당한 사유 없이 수행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임직원, 과제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의 명의로 출원 하거나 등록한 경우

12. 기타 협약내용을 위배하거나 협약서상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 및 지원금 환수와 관련된 사항은 제21조의 평가위원회 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③ 진흥원장은 제1항 제4호와 제5호의 사유로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자가 해당 금액을 납부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참여 제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참여 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

④ 진흥원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할 필요가 있을 경우 해당 과제에 이미 교부된 지원금의 범위 내에서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 등으로부터 환수할 수 있다.

⑤ 진흥원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할 경우에는 현금으로 환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참여 제한을 받은 자가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지원사업 접수마감일 이전에 참여 제한 기간이 종료되어야 한다.

⑦ 진흥원장은 제1항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행위가 범죄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형사고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1년 4월 22일부터 시행하며 시행일 이후에 2021년도 강소기업 육성 R&D 지원사업으로 협약하는 과제부터 적용한다.

[별표 1] 평가위원회 등록 양식

[별표 2] 사업비 비목별 용도 및 계상 기준

[별표 3] 문제과제에 대한 제재 및 환수 기준

[별표 1]

## 평가위원회 등록 신청서

### ○ 개인정보

성명	(한글)	연락처	(핸드폰) (사무실)
	(영문)		
주민등록번호	-	전공분야	
주소(주민등록증)			
은행/계좌번호	* 심사비 등 입금용도의 계좌(본인명의)		

### ○ 학력정보

학위구분	취득일자	학위 논문제목	취득기관	위치

### ○ 주요경력

기간(일시)	주요업무	직책	기관명	위치
~				
~				
~				
~				

### ○ 기타(주요 논문 및 수상경력 등)

기간(일시)	주요내용(논문제목)	기관명	위치(게재지)

상기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화성산업진흥원 ‘강소기업 육성 R&D 지원사업’ 운영지침에 근거하여 평가위원회 등록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재단법인 화성산업진흥원장 귀하

[별표 2]

## 사업비 비목별 사용 용도 및 계상 기준

구 분		사용 용도	계상 기준
비목	세목		
인건비	내부 인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행기관 소속 연구원이 해당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지급되는 인건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행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사업기간 동안의 실지급액을 과제참여율(100%를 초과하지 못한다)에 따라 계상한다.</li> <li>대학교수, 기업 소속 연구원, 국·공립연구소 등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로 계상하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함 ※ 단, 제14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에 한해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li> </ul>
	외부 인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행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아니하나 해당 기술 개발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li> <li>연구비관리 우수기관으로 인증된 대학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학생연구원 인건비를 과제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할 수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사업기간 동안의 실지급액을 해당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li> <li>대학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과제별 투입되는 인원 총량으로 계상한다.</li> <li>대학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연구책임자가 공동 관리를 해서는 아니 된다.</li> </ul>
직접비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당과제에 1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와 부수 기자재(해당과제 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용 컴퓨터는 제외),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 경비</li> <li>시약 및 재료의 구입·사용 경비, 시험 분석료, 전산처리·관리비</li> <li>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 경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실소요 경비를 계상하되, 현물의 계상기준은 진흥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li> </ul>
	연구 활동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자의 국내·외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li> <li>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등</li> <li>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훈련, 기술정보수집비, 도서 등 문헌 구입비, 회의비,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특허정보조사비, 정보DB 및 네트워크 사용료, 사업화전략 및 엔지니어링 컨설팅 비용 등</li> <li>세부(단위)과제가 있는 경우 해당 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li> <li>해당 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실소요 경비를 계상한다.</li> <li>출장비의 경우 국·공립 대학, 국·공립 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에 대해서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적용</li> </ul>

구 분		사용 용도	계상 기준
비목	세목		
간접비	간접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구지원에 관한 경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당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기관 공통지원경비</li> <li>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 경비 및 비품 구입 경비</li> <li>수행과제와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경비(인건비의 2% 범위에서 집행)</li> <li>수행과제와 관련하여 보안 장비 구입, 보안교육 등 과제 보안을 위한 필요 경비</li> <li>연구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 학술정보용 도서 및 Web-DB 구입비, 실험실 운영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논문 게재료 등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은 경우에 한함)</li> </ul> </li> <li>성과활용지원에 관한 경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행과제 홍보를 위한 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 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li> <li>수행과제와 직접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에 필요한 모든 비용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비용 (특허유지비는 해당 지식재산권의 기술이전 가능성이 높을 경우에 한하여 최초 특허 등록 기간 종료 후 2년간 집행할 수 있다.)</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영리기관은 성과활용 지원에 관한 경비, 연구지원에 관한 경비 중 연구보안관련경비 및 연구실안전에 관한 경비에 한해 실소요 경비를 계상할 수 있다.</li> </ul>

[별표 3]

## 문제과제에 대한 제재 및 환수 기준

### ○ 총괄기준

제재 및 환수 사유	제재 및 환수 기준	
	참여제한	지원금 환수
•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3년	전액환수
• 과제 수행을 포기한 경우		
• 지원금 전액을 반납한 경우	면제	-
• 지원금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3년	전액환수
• 과제 수행의 평가결과로 중단, 실패한 경우		
• 수행결과가 극히 불량하거나 불성실하게 수행하여 중단, 실패한 경우	3년	전액환수
• 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하였으나 중단, 실패한 경우	*1년 이내	면제
• 과제 관리의 책임이 있는 자가 이를 해태한 경우	1년	면제
•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부도·폐업으로 중단, 실패한 경우 (보고서 제출 등 의무사항을 충실히 이행한 경우)	1년	면제
•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행내용을 누설·유출하거나, 보안관리·비밀 준수·청렴 의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내	전액환수
•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기관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한 경우	2년 이내	면제 또는 환수
• 정당한 사유 없이 정산금 또는 환수금을 납부기관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한 경우	*2년 이내	*면제 또는 환수
• 사업비를 사용 목적 외로 집행한 경우		
• 사업비를 횡령, 편취하거나 유용한 경우	5년	해당금액 환수
• **사업비를 타 용도로 일시 전용하여 사용한 경우 (전용한 금액을 사업비 통장에 입금한 경우)	2년	해당금액의 30% 환수
• 정당한 사유 없이 각종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3년 이내	*면제 또는 환수
• 과제수행 관련 자료·결과 등을 위조, 변조, 표절하거나 부당하게 논문저자를 표시하는 등 연구부정행위를 한 경우	3년	전액환수
• 정당한 사유 없이 지식재산권을 개인명의로 출원·등록한 경우	1년	-
• 협약내용을 위배하거나, 협약서상 의무사항을 이행하도록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한 경우		
• 협약서상 부담하기로 한 민간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한 경우	1년	면제
• 협약서상 의무사항을 이행하도록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한 경우	2년	해당금액 환수
• 민간투자자유치를 의무화하는 사업의 경우, 투자계약이 변경, 무효화, 양도된 경우	*3년 이내	*면제 또는 환수

\* 세부기준 기준에 따라 참여제한 및 지원금을 환수

\*\* 지원금 일시전용의 경우 1차에 한해 해당기관에 대한 주의조치로 상기조치를 대신할 수 있음

## ○ 세부기준

### 1.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였으나 중단, 실패한 경우

세부사유	제재 및 환수 기준	
	참여제한	지원금 환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장의 미성숙, 결과활용의 불투명 등 기술성·사업성이 미흡하여 중단, 실패한 경우</li> </ul>		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과제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li> </ul>	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과제의 목표를 달성한 경우</li> </ul>	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진흥원 산업기술정책상 중단된 경우</li> <li>과제의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상대평가에 따라 하위과제로 분류되어 중단된 경우</li> <li>기타 중단, 실패 등의 귀책사유가 해당기관에 없을 경우</li> </ul>	면제	

### 2. 정산금 또는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게을리 한 경우

구분	세부사유	제재 및 환수 기준	
		참여제한	환수
경영악화의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저한 경영악화</li> <li>기관신용도 평가결과 하급 또는 불량인 경우</li> </ul>	면제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도·폐업·파산 및 그에 준하는 사유</li> <li>직전년도 매출액이 전무하거나 영업장이 폐쇄 또는 멸실된 경우</li> </ul>	1년	면제
정상 운영중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관신용도 평가결과 하급 또는 불량이고 재산조사결과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li> </ul>	2년	2년간 유예 후 신용도 재조회 결과 동일 평가시 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관신용도 평가결과 중급 이상이거나 재산조사결과 실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li> </ul>	2년	해당금액 환수

### 3.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세부사유	제재 및 환수 기준	
	참여제한	지원금 환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에 따른 중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li> </ul>	3년	전액 환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당한 사유 없이 제22조에 따른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당한 사유 없이 제26조에 따른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li> </ul>	1년	-

4. 수행 내용을 누설·유출하거나 보안관리·비밀준수 청렴의무를 위반한 경우

세부사유		제재 및 환수 기준	
		참여제한	지원금 환수
•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행 내용을 누설·유출한 경우	국내에 누설·유출한 경우	2년	전액 환수
	국외에 누설·유출한 경우	5년	전액 환수
• 보안관리, 비밀준수, 청렴의무를 위반한 경우		1년	—

5. 투자계약이 변경, 무효화, 양도된 경우 (민간투자유치를 의무화하는 사업에 한함)

세부사유		귀책대상기관 및 대표자		해당 투자기관 협의회 회원
		정부지원금 환수	참여 제한	참여제한
● 피투자기업이 투자당시 공개기업이면서 투자기관협의회 회원이 인수한 주식을 1년 이내에 시장에 매각하는 경우		면제	—	2년
● 사전 승인 없이 투자계약을 양도 또는 변경하는 경우		면제	1년	1년
● 투자계약을 불이행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투자기관 협의회 회원에게 있는 경우	—	—	1년
	귀책사유가 주관기관에게 있는 경우	—	1년	—
● 체결된 투자계약이 사실상 무효화 되거나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한 경우		환 수	3년	*3년
● 체결된 투자계약이 기술개발기간 내에 특수관계에 있는 자 또는 개인에게 양도된 경우				
* 단, 투자계약을 체결한 투자기관협의회 회원이 주관기관의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협약해약을 요청한 이후, 양도된 경우는 제외한다.				